



주간 통일정세

2009-4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함남 발전소 시찰(11/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정평군에 새로 건설한 금진강구창청년발전소와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은 함경남도 정평군에 새로 건설한 금진강구창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면서 금진강청년돌격대의 자료집과 돌격대원이 만든 시집, 소묘집 등 3권의 책을 직접 봄. 조선중앙TV도 이날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사진 여러 점을 내보내면서 김 위원장이 소묘집을 직접 보는 사진을 공개
- 특히 김 위원장은 본 '소묘작품집'에 수록된 한 작품에는 후계자 김정은 찬양가요인 '발걸음'이 큰 글씨로 쓰여있고 여성대원이 아코디언으로 연주를 하는 모습과 여성대원들이 발걸음을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담겼음. 그림의 배경으로 한줄의 악보도 담겨 '발걸음' 악보의 일부라는 추정
- 김 위원장이 각급 공연에서 '발걸음'이라는 노래공연을 직접 관람한 데 이어 '발걸음' 노래를 소재로 한 그림작품까지 감상하고 이를 중앙TV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김정은 후계구도가 공고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현지지도에는 태종수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당 주장들인 박남기, 장성택이 동행

● 김정일, 흥남비료 현지지도(1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에 위치한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가스화공정 건설장과 2.8비날론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 김 위원장은 흥남비료 가스화공정 건설장을 둘러보고 공사 추진 실태를 파악한 뒤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 생산은 적은 전력과 우리의 원료자원에 의거해 비료생산을 늘릴 수 있는 주체적인 비료생산 방법"이라며 "비료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스화대상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통신은 보도
- 김 위원장의 기업소 현지지도에는 태종수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박남기 장성택 당 부장이 동행



- 김 위원장은 기업소 현지지도에 이어 이들 기업소 종업원 예술소조의 공연도 관람,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에는 태 책임비서와 김기남 당 비서, 당중앙위 부장 및 1부부장, 도와 기업소 책임간부들이 참석

● **김정일, 평북 협동농장 시찰(1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농장에서 생산한 갖가지 농작물들을 보면서 올해 영농사업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두벌농사(이모작)를 잘해 “전례 없는 대풍”을 마련했다며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언
- 그는 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농업 생산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부침땅(경작지)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북)에서 알곡 생산을 늘리는 큰 예비는 두벌농사를 잘하는 것”이라며 이모작 확대를 강조
- 현지지도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장성택,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이 수행

나. 정치 관련

● **통일신보, 南당국에 공동선언 이행 촉구(11/7,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7일자 ‘동네 북 신세가 된 대북정책’이라는 제목의 단평에서 ‘남조선 당국’을 명시해 거론하면서 “북남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
- 신문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속에서 당국의 대북정책을 야유·조소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이 사회 각계의 못매를 맞는 동네 북 신세가 된 것”은 “변화된 북남관계와 거래의 요구를 외면하고 ‘비핵·개방 3000’과 같은 대결정책을 계속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떠나 북남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생각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

● **통일신보, 작계 5029, 북침전쟁선언(11/7,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7일자 ‘극히 무모한 선제공격기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과 미국이 최근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작전계획 5029’에 대해 “북침전쟁을 선언한 것”이라고 반발
- 신문은 ‘작계 5029’의 완성은 “우리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이고 대결과 전쟁을 고취하는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면서 “‘급변사태’라는 것은 영도자와 인민과 군대가 하나의 사상의지, 숭고한 도덕의리로 굳게 단합되어 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



● 北, 국토환경보호상 김창룡으로 교체(11/5, 연합)

- 북한은 최근 박송남 국토환경보호상을 해임하고 후임에 김창룡을 임명한 것으로 5일 확인됨.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중앙양묘장에 운수기재들을 보낸 데 따른 선물 전달 모임이 4일 열렸다고 보도하면서 참석자의 한 사람으로 '김창룡 국토환경보호상'을 들었음.
- 북한은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때 박송남을 유임시켰음. 신임 김창룡 국토환경보호상의 자세한 인적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음.

● 北, 인권문제, 협조정신으로 다뤄야(11/3, 조선중앙방송)

- 유엔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가 10월 28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64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유엔 차원의 대북 인권결의를 겨냥해 “대결이 아니라 협조를 도모하는 정신에서 인권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일 보도
- 북한 대표는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원칙의 하나로 이같이 주장하고 유엔인권이사회와 3위원회에서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 “냉전시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세력들이 여전히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들”이라거나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반발

다. 경제 관련

● 北TV 상품광고, 김정일 지시로 급제동(11/8, 연합)

- 북한 조선중앙TV의 상품광고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짐.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8일 “김정일 위원장이 얼마 전 TV를 시청하다가 광고를 보고 ‘저 광고는 뭐냐? 저런 광고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한 짓’이라고 화를 내면서 방송을 관장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장의 철직(해임)을 지시했다”고 전언
- 조선중앙TV는 지난 7월 2일 대동강 맥주 광고를 방송한 것을 시작으로 개성고려인삼, 머리핀, 옥류관 메추리 요리 광고를 방송 프로그램 사이에 내보냈었음. 그러나 연합뉴스가 수신한 조선중앙TV 방송 내용을 점검한 결과 8월 31일을 끝으로 북한TV에서 상품광고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조선중앙TV의 상품광고 방송 실험은 2개월만에 막을 내린 것으로 보임.
- 특히 차승수 중앙방송위원장의 철직은, 문제의 TV광고 방송의 시발점이 사실상 김 위원장의 지시에 있었다는 점에서 차 위원장으로서선 억울한 일을 당한 셈이라고 소식통들은 전언, 소식통은 “김정일 위원장이 ‘TV방송 프로그램을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하게 구성해 보라’고 지시하면서 중앙방송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식 상품광고를 방송에 내보냈던 것”이라고 설명



- **오라스콤회장, 대북투자는 통일시장 선점효과(11/6, 미국의 소리방송)**

 -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콤 텔레콤 회장은 대북 투자 이유로 한반도 통일 전망을 고려한 북한 시장 선점 효과를 들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6일 보도, 사위리스 회장은 10월 12일 열린 회사 경영진과 세계 주요 투자은행 분석가들 사이의 ‘전화 회의’에서 “북한 시장은 리스크(위험) 요소에 비해 기대 효과가 훨씬 크다”며 “현재의 정세를 종합해 보면 언젠가는 남북한이 통일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북한 시장의 선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고 언급
 - 그는 105층짜리 평양 류경호텔의 공사 재개를 위한 오라스콤 텔레콤의 대규모 투자는 “북한에 대한 선의의 표시”라며 “이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류경호텔이 완공되면 오라스콤 텔레콤의 북한내 본부가 될 것”이라고 언급, 비카라 이사는 특히 북한 이동통신 사업 투자를 통해 북한이 깔아놓은 광섬유 통신선으로 이동통신을 운영하는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밝힘.

- **유니세프, 北아동·여성 영양실태 조사중(11/4,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10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5년 만에 대규모 영양실태 조사를 재개함에 따라 연말이나 내년 초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
 - 유니세프측은 북한 당국의 거부로 2004년 이래 5년째 중단됐던 조사를 10월 예정대로 착수해 “큰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2004년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진행된다고 설명
 -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함경북도와 량강도를 비롯한 북한 전역의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유니세프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2년에 한번씩 영양조사를 실시했지만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2004년 이후 조사가 중단됐음.

- **北술공장, 전 종업원 새 품종 개발에 참여(11/3, 조선신보)**

 - 북한의 대표 소주인 ‘평양소주’를 생산하는 평양소주공장이 최근 종업원들이 직접 착상, 개발한 깃잎술, 쑥술, 솔잎술, 황경피나무열매술, 도라지술 등 12종의 새 술을 내놓았다고 조선신보가 3일 소개
 - 이들 술은 모두 “평범한 노동자들이 생산활동 과정에 연구 개발한 것”들로, 이 공장은 술 품종 확대사업에 기술자뿐 아니라 전 종업원이 참가하도록 했었음.

- **北, 겨울철 생산 대책 총력 촉구(10/29,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0월 29일자 ‘겨울철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자’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겨울철을 앞두고 채취공업과 철도운수, 임업, 건설 부문에서 월동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생산과 건설에서 차질이 발생



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독려

- 신문은 특히 철도운수부문에 대해선 각 경제부문의 겨울철 생산준비를 위한 물자를 겨울철 이전에 조속히 실어나를 것을, 건설부문에 대해선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평양시 주택건설을 비롯한 주요 건설장에서 공사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래와 자갈 등 건설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할 것을 각각 독려

라. 군사 관련

● 북, 폐연료봉 8000개 재처리 끝내(1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일 '조선(북한)에서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통해 "폐연료봉 8000개의 재처리를 지난 8월 말 끝냈으며 여기서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무기화하는 데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다"고 주장, 북한은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대처해 부득불 자위적 억제력 강화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고 주장
- 폐연료봉 재처리는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가로 추출했다는 의미로, 8000개를 모두 재처리하면 7~8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통상 핵무기 1개를 제조하는 데 플루토늄 6~7kg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은 이 과정을 통해 핵폭탄 1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원료를 추가로 확보한 셈임.

마. 사회·문화 관련

● 북한 TV도 손씻기 장려(11/4, 조선중앙TV)

- 겨울철을 맞아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중앙TV가 4일 손씻기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냄. 이 방송은 "감기예방에 제일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손을 정상적으로 씻는 것"이라며 "사람의 손은 하루에도 1억개 이상의 세균과 비루스(바이러스)와 접촉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손을 비누 또는 세척제로 씻으면 손에 묻은 세균과 비루스를 씻어 버릴 수 있으므로 감기 발병률을 훨씬 낮출 수 있다"고 밝힘.
- 최근 북한도 신종플루의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 국경초소에서 검역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비상방역위원회는 중앙 및 지방의 보건기관들에 "사소한 징후도 놓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월 30일 보도

● 北월드컵팀 정대세 '인민체육인' 칭호 수여(11/3,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교도통신)

- 북한은 1966년 잉글랜드 대회 이후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낸 남자축구 대표팀의 김정훈 감독과 정대세를 비롯한 선수들에게 '인민체육인'과 '공훈체육인' 칭호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일



본의 교도통신이 보도.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박학선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정훈 감독과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열린 표창식에서 김정훈 감독과 정대세를 비롯한 16명이 ‘인민체육인’ 칭호를, 미드필더인 지윤남 등 3명이 ‘공훈체육인’ 칭호를 받음.
 - 또 체육지도위원회 김정식 부국장이 김일성의 이름을 새긴 시계표창을, 김정수 부국장이 김정일의 표창장을 각각 받았으며 ‘국기훈장’ 제1급 1명, ‘국기훈장’ 제2급 8명 등 “많은 선수와 일꾼들에게 훈장과 메달이 수여됐다”고 통신은 3일 보도
 - 조선중앙방송도 표창 소식을 전하면서 남자축구 선수들이 월드컵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고 강성대국 건설대전을 벌이고 있는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했다고 표창 이유를 설명
- **北, 6억2천만년전 동물화석 발견 주장(10/28, 교육신문)**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부의 교수와 연구사들이 황해북도 평산군에서 “6억 2천만년 전의 것으로 판명”된 관 모양의 동물화석을 발견했다고 교육신문이 보도, 신문은 이들이 고생물학 전문가들로서 평산군 “현지에서 발견한 원시바다풀 화석과 원시해파리 화석을 고찰하고 그 지층을 따라가며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길이 5cm 되는 관 모양의 관상동물 화석을 발견”했다고 보도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北, 북미대화 여러 차례 원해(11/8, 니혼게이자이신문)**
- 북한과 미국의 북미 대화 물밑 교섭 과정에서 북한측이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양측 고위급 대화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할 것을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복수의 북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8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물밑 접촉에서 미국측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 폐기를 명기한 2005년 6자회담의 공동성명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확약하면 협상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북한은 6자회담 이전에 열리는 북미 대화에 대해 ‘4~5회’를 예로 들었다고 신문은 전언
- **美, 북미양자대화 무한정지속 원치않아(11/7, 연합)**
- 미국 정부는 늦어도 연내에는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대화를 시작하더라도 양자 대화를 오래 지속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6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미대화의 개최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회담이 성과 없이 무한정 가는 것은 아무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도 이 협의가 무한정 지속되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 이 당국자는 “미국은 북미대화를 가진 후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북미대화 횟수를 (한차례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대화가 지속되는 것은 선호하지 않으며 가급적 빨리 6자회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
- 그는 “6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들이 있지만, 6자회담이 열릴지는 아직도 미지수”라고 덧붙임.

● 보즈워스, 訪北 계획 조만간 발표(11/7, 연합)

- 5일 저녁 워싱턴 DC의 미 상공회의소에서 한미 재계회의가 개최한 리셉션에 부인과 함께 참석한 그는 “언제 북한에 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언제라도 북한에 갈 준비가 돼 있고, 조만간 특정 시점에 (방북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

● 베이더, 美, 北과 직접대화할 준비(11/7, 연합)

-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북한과 직접적인 개입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북.미 대화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동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힘.
- 베이더 보좌관은 “6자회담 프로세스가 올바른 틀이고, 비핵화가 (회담의) 의제가 돼야 하며, 2005년 (9.19) 선언이 여전히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북한이 이해하고 있다는 진정한 신호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평양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갖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힘. 그러나 “양자회담은 6자회담과 기존의 관련된 합의가 전제된 맥락에서 열려야 한다”고 미 행정부의 기존 입장이 되풀이 강조한 뒤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며, 영변을 3번째로 사는 일도 없을 것이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힘.

● 北 리근 방미 마치고 귀국(11/5, 연합)

-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10박 11일 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5일 귀국, 리 국장은 북한 고려항공 정기 운항일인 이날 오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최재진에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을 떠났음.

● 北대표단, 중국 종속 원치 않는다(11/5,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달 뉴욕에서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한토론회에서 북한 대표단은 “우리는 전적으로



중국에 종속되길 원치 않는다”며 한국, 미국, 일본 등과 경제교류 확대를 희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

- 이 방송은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10월 30일 공동주최한 북한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보도

● 엘바라데이, 북핵, 해법은 포괄타결 뿐(11/5, 자유아시아방송)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패키지 딜(포괄타결)’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
-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4일 미국 뉴욕의 외교협회(CFR) 연설에서 “북한은 안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미국이 정권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유일한 카드인 “핵계획을 통해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려고 노력 중”이라며 안전보장과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북한의 핵폐기와 맞바꾸는 패키지 딜을 주장

● 北대표단, 6자틀내 북미대화 언급(11/5, 연합뉴스)

-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했던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6자회담에 열린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6자회담 틀 내의 북미 양자대화’를 언급하는 신축적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4일 전해짐. 리근 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뉴욕에서 열린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 비공개 북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소식통이 전언
-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분명히 더 선호하지만, 6자회담에도 열려 있다고 말했으며, 특히 한 북한 참석자는 “6자회담 틀 내의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미국과 안보 문제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며, 이는 6자회담의 진전을 이끌 것”이라고 밝힘.
- 북한 대표단은 또 미국과의 양자관계가 재개되는 최근의 좋은 신호들에 만족한다고 말하면서 북한은 언제든 미국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했다고 전언, 북한 대표단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진다면 역내 미군의 주둔을 북한이 환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짐. 소식통은 “한 북한 참석자는 북한과 미국간의 고위급 대화의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다”고 전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 북한 대표단은 제재 철폐를 원하고 있지만 제재 철폐가 대화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고 소식통은 소개, 북한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북한에 몇몇 기회가 있었다”면서 “북한은 확산을 할 의도가 없지만, 미국이 북한을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경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짐. 또 북한



은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받기를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도 보임.

- 북한은 지난 4월 이뤄진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합법적인 인공위성 발사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미국과 유엔의 대응을 비난했고, 현재의 휴전협정을 대체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 이밖에 북한 대표단은 관계정상화, 경제지원,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비핵화시 가능한 반대급부를 한 미국 참석자가 언급하자 “좋은 패키지”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 이와 함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국과의 경제·문화적 교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한국과는 현정은 현대 그룹 회장의 8월 방북 이후 나은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

● 美, 北 9.19공동성명·유엔결의 위반(11/4, 연합)

- 미국은 3일 북한이 ‘폐연료봉 8천개의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발표하는데 대해 9.19 공동성명에 상반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비핵화 조치 착수를 촉구
-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플루토늄 재처리는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스스로 약속한 것과 상반된 것이며,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도 하다”고 밝힘. 켈리 대변인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를 북한이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
- 하지만 그는 ‘북한의 발표를 비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비난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여지를 남김. 그는 ‘북한의 이번 발표가 긴장을 높이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함.
- 켈리 대변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은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에 이를 수 있도록 할 6자회담 재개”라면서 “진전을 위한 길이 있으며, 그 길은 6자회담 재개 및 모든 당사국들이 2005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 그는 “동북아 긴장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평화적 해법이라는 목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언급하면서 “모두가 신중하고, 수사(rhetoric)를 완화하며, 긴장을 일으킬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
- 그는 또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성 김 특사와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간의 뉴욕접촉에서 “역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적 해법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단언할 기회를 가졌다”고 전언
- 켈리 대변인은 미국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성 김 특사가 이제 막 돌아왔고,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해외 순방중”이라면서 “결정을 내릴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시점이 아니다”라고 답변



● **北, 美 의원단 방북도 요청(11/4, 산케이신문)**

- 북한이 미국에 대해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함께 미국 상·하원 의원단의 북한 방문도 타진했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미·일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4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미국측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 관련 시설 공개를 방북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RFA, 北김책공대 총장 111월말 방미(11/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홍서헌 총장이 학술교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1월 29일 미국에 도착해 시라큐스대학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 RFA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홍 총장을 포함한 4명의 김책공대 대표단은 뉴욕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
- 김책공대 대표단은 최근 북한 당국으로부터 방미 승인을 받고 미국 무부에 신청한 입국 비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언, 시라큐스대는 지난 2001년부터 정보기술(IT) 부문을 중심으로 김책공대와 교류하고 있으며 두 대학의 과학자들은 서로 수차례 상호방문하면서 공동 연구사업을 하고 있음.

● **美, 북미 매우 유용한 논의(11/3, 연합)**

- 미국은 2일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방미 기간 이뤄진 북미간 접촉이 매우 유용했다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성 김 특사와 리근 국장간에 10월 24일 열린 뉴욕접촉과 관련, "성 김 특사가 매우 유용한 논의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 켈리 대변인은 "이번 논의들은 6자회담 재개라는 당장의 목표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유용한 접촉이었다"고 언급, 그는 "성 김 특사가 리 근 대사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
- 켈리 대변인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문제에 대해서도 "보즈워스 대표의 북한 방문에 대한 초청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즈워스 대표가 방북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
- 그는 또 미국에 양자대화를 촉구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이날 언급이 6자회담 등 다자회담 재개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그것(6자회담 재개)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로 이끌 수 있는 6자회담 재개"라고 밝힘. 그는 이어 "우리의 정책은 분명하다"면서 "(6자회담의 나머지) 4개 파트너들과의 완전한 협의가 이뤄지고, 6자회담 재개라는 맥락에서 이뤄진다면 우리는 양자적 맥락에서 북한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으며, 우리는 이 정책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고 강조



- **北외무성, 美에 양자대화 “결단” 촉구(1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일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당사자들인 조미(북미)가 먼저 마주앉아 합리적인 해결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에 대해 북미간 양자회담에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가 아량을 보여 미국과 회담을 해보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이제는 미국이 결단을 내릴 차례”라고 주장, 그는 “조미 사이에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게 될 것”이라며 북미 양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점임을 강조
 -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아직 우리와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도 그만큼 제 갈 길을 가면 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북미 양자회담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핵억제력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
 - 그는 리근 미국국장이 미국을 방문, 제20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하고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성 김 북핵특사와 접촉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 접촉은 조미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아니었고 따라서 접촉에서는 조미대화와 관련되는 실질적인 문제가 토의된 것이 없다”고 주장
 - 그는 북미 양자회담 후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 개최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우리의 입장은 조선반도 비핵화가 실현되려면 조미 적대관계가 청산되어 우리의 핵보유를 산생시킨 근원을 완전히 없애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이고도 타당한 요구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언급
 - 외무성 대변인은 또 “지난 6년간에 걸치는 6자회담 과정은 조미 사이에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지 않는 한 6자가 아무리 회담을 해도 그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해 줬다”며 “미국이 유독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만을 한사코 걸고 들다 못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가 제재를 발동시킴으로써 9.19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인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은 말살되고 성명은 무효화됐다”고 주장

나. 북·중 관계

- **中, 北·美 접촉 환영(11/5, 연합)**
 - 마자오취(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 “우리는 북미 접촉과 북미간 관계 개선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언급
 - 마 대변인은 “우리는 북·미간 접촉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 달성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고 6자회담을 조속히 재



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그러나 마 대변인은 리 국장이 이틀간 베이징에 머물면서 중국 관리들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北 공군대표단 訪中(11/3, 연합)**

- 북한 공군 부사령관 김광수 소장이 이끄는 공군대표단이 중국 공군 창설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3일 베이징에 도착, 김광수 소장 일행은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의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한 후 북한 대사관으로 향했음.

다. 북·러 관계

● **러시아, 북한 핵 보도 과장 말아야(11/7, 연합)**

- 러시아 외무부의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 무기화했다는 보도는 대화 개시를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언급,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조치가 현 상황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극적으로 과장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

라. 북·일 관계

● **北, 日 민주당 정권에 ‘흑시나’에서 ‘역시나’로(11/4, 조선신보)**

- 북한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일본 의회 연설에서 밝힌 대북 정책에 대해 “평양선언의 정신을 무시 혹은 왜곡하는 것으로서 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4일 보도
- 신문은 ‘의지를 보여야’라는 제목의 ‘메아리’ 코너에서 하토야마 총리의 연설은 “일본에 대한 조선(북한)의 불신감을 덧쌓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언급
- 조선신보는 하토야마 정권이 “서로 성격이 다른 문제들을 억지로 결합시켜 그 ‘포괄적인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점, ‘납치문제’를 더 강조하는 점, “조일(북일)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본에는 여전히 양국간 관계개선의 의지도 없고 준비도 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주장

● **日, 北재처리 안보리 결의위반(11/4, 연합)**

- 일본 정부 대변인인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4일 북한의 전날 폐연료봉 재처리 발표와 관련 “사실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힘.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



- 하고 “북한은 한시라도 빨리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
-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은 “(북한의 발표는)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는 자신의 카드를 높이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

3. 대남정세

● 샘의료복지재단 北에 의료장비 전달(11/5, 연합)

- 기독교 국제지원단체인 샘의료복지재단(대표 박세록)이 북한에 구급의료장비인 ‘사랑의 왕진가방’ 3천 개를 전달, 5일 재단 시애틀지부(지부장 박상원)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과 재단 관계자 등 40명은 지난달 31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지난 8월 중국 단둥병원에서 3주에 걸쳐 만든 왕진가방을 기증, 이들은 또 황해남도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수행함.

● 남북공동 안중근의거 100주년 모임 개성서 개최(10/3, 조선중앙통신)

-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모임이 3일 개성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모임에는 남측에서 함세웅 이사장 등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조광 안중근연구소장 등이, 북측에서 장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장, 정덕기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
- 모임에선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묵념과 연설에 이어 ‘안중근 열사의 애국적 장거와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달 26일부터 안 의사의 순국 100년이 되는 2010년 3월26일까지를 ‘안중근 열사 기념 반일 공동투쟁 기간’으로 정해 “대중적 운동을 과감히 벌려” 나가는 방안에 관한 토론이 열렸다고 통신은 전언
- 통일부 관계자는 “남측에서 9명이 개성을 방문해 북측과 행사를 가졌다”며 “안 의사가 천주교 신자여서 함세웅 신부가 이사장으로 있는 기념사업회측에서 북측과 행사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

● 북한産 모래반입 부분 재개 (11/3, 연합)

- 정부는 올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때 중단시킨 민간업자들의 북한산 모래 반입을 10월 27일부터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3일 밝힘.
- 이 당국자는 “업체들이 북측에 투자(대금지불)를 했다가 정부의 반입 중단 조치로 인해 투자한 만큼의 모래를 들여오지 못한 경우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기 투자분 회수’가 끝나면 건별로 심사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언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엘바라데이 “북핵 해법은 포괄타결 뿐”(11/5)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패키지 딜(포괄타결)’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함.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4일 미국 뉴욕의 외교협회(CFR) 연설에서 “북한은 안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미국이 정권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유일한 카드인 “핵계획을 통해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려고 노력 중”이라며 안전보장과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북한의 핵폐기와 맞바꾸는 패키지 딜을 주장함.
- 그는 “미국과 북한이 이미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에서 이(패키지 딜)를 합의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사실 북한의 핵 폐기를 대가로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것은 제 생각엔 싼 가격”이라고 말함.

● “北대표단, 6자틀내 북·미대화 언급”(11/5)

-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했던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6자회담에 열린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6자회담 틀 내의 북·미 양자대화’를 언급하는 신축적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4일 전해짐. 리 근 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뉴욕에서 열린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 비공개 북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소식통이 전함.
-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분명히 더 선호하지만, 6자회담에도 열려 있다고 말했으며, 특히 한 북한 참석자는 “6자회담 틀 내의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미국과 안보문제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며, 이는 6자회담의 진전을 이끌 것”이라고 밝힘. 북한 대표단은 또 미국과의 양자관계가 재개되는 최근의 좋은 신호들에 만족한다고 말하면서 북한은 언제든지 미국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했다고 전하기도 함.
- 북한 대표단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진다면 역내 미군의 주둔을 북한이 환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짐. 소식통은 “한 북한 참석자는 북한과 미국간의 고위급 대화의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다”고 전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 북한 대표단은 제재 철폐를 원하고 있지만 제재 철폐가 대화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고 소식통은 소개함.

- 아울러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미간 외교적 해법 마련이 지연될 경우 핵확산 우려도 참석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짐. 북한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북한에 몇몇 기회가 있었다”면서 “북한은 확산을 할 의도가 없지만, 미국이 북한을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경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대표단은 이 밖에 북한은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받기를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도 보였음. 또 지난 4월 이뤄진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합법적인 인공위성 발사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미국과 유엔의 대응을 비난했고, 현재의 휴전협정을 대체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
- 이 밖에 북한 대표단은 관계정상화, 경제지원,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비핵화시 가능한 반대급부를 한 미국 참석자가 언급하자 “좋은 패키지”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이와 함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국과의 경제·문화적 교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한국과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8월 방북 이후 나온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함. 이 소식통은 “북한이 궁극적인 비핵화 여부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계속 유지했다”면서 “미국의 확산 조치 없이는 핵억제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한편 북측 대표단은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서 “일본 정부는 북한이 긍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짐.

● 글레이저 “대북제재 이행 중국이 정말 중요”

-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3일 대북 제재의 이행에서 “중국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함.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이날 뉴욕의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은 금융 조치 등 대북 제재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금융 제재는 많은 국가가 참여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각국과의 협력을 위해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그는 금융 제재는 국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한편 미국의 외교와 국익을 지키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경우 미국의 국익과 관련한 제재의 목적은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그는 국제 금융시스템의 보호는 돈세탁이나 테러 지원, 핵확산 등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제 금융시스템의 룰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함.



-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를 예로 들어 “북한은 국제금융시스템의 접근에서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다”면서 “북한이 국제 금융시스템의 룰을 알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함. 그는 다만 “제재는 포괄적인 정책의 일부이고 금융 조치들은 그 중요한 부분”이라며 제재가 포괄적인 정책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해 대북 정책에서 제재가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함.
-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존 딜렐리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소장은 “대북 제재는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여가 북한의 고립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밝힘. 그는 제재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면서 이런 점에서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함.
- 아시아소사이어티는 최근 내놓은 ‘대북 경제지원 연구’ 보고서에서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현재와 미래의 위협을 막을 수 없지만, 경제적 지원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촉진하거나 미국과 그 동맹국가들을 위협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힘.

● 日 “北 재처리 안보리 결의위반”(11/4)

- 일본 정부 대변인인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4일 북한의 전날 폐연료봉 재처리 발표와 관련 “사실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힘.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히라노 장관은 “북한은 한시라도 빨리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덧붙임.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은 “(북한의 발표는)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는 자신의 카드를 높이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함.

● 美 “北 9.19공동성명·유엔결의 위반”(11/4)

- 미국은 3일 북한이 ‘폐연료봉 8천개의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9.19 공동성명에 상반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비핵화 조치 착수를 촉구함.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플루토늄 재처리는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스스로 약속한 것과 상반된 것이며,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도 하다”고 밝힘.
- 켈리 대변인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를 북한이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하지만 그는 ‘북한의 발표를 비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비난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여지를 남김. 그는 ‘북한의 이번 발표가 긴장을 높이는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함.



- 켈리 대변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은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에 이를 수 있도록 할 6자회담 재개”라면서 “진전을 위한 길이 있으며, 그 길은 6자회담 재개 및 모든 당사국들이 2005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동북아 긴장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평화적 해법이라는 목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함.
- 이와 관련, 그는 “모두가 신중하고, 수사(rhetoric)를 완화하며, 긴장을 일으킬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함.
- 그는 또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성 김 특사와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간의 뉴욕접촉에서 “역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적 해법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단언할 기회를 가졌다”고 전함.
- 켈리 대변인은 북·미 양자대화 문제와 관련, “6자회담의 맥락에서, 6자회담 참여국의 지지와 이들 국가와의 조율 속에서 북한과 양자 대화를 가질 용의가 그대로 있다”면서 “언제, 어디에서 이런 양자대화들을 가질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뿐”이라고 밝힘.
- 그는 미국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성 김 특사가 이제 막 돌아왔고,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해외 순방중”이라면서 “결정을 내릴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시점이 아니다”고 말함.

● 北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핵무기화 성과”(11/3)

- 북한이 폐연료봉 8천개의 재처리를 지난 8월말 끝냈으며 여기서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무기화하는 데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3일 주장함. 통신은 ‘조선(북한)에서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지난 4월 조선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 가 대 조선 제재를 발동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갔다”고 상기시키고 “이 기간 조선은 6자합의에 따라 무력화됐던 영변 핵시설을 원상복구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재처리 시설을 가동시켰으며 8천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8월 말까지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말함.
- 이에 앞서 지난 9월 초 북한은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 명의로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고 이번 중앙통신 보도와 거의 같은 주장을 했었음. 통신은 3일 “국제법적 절차를 거쳐 정정당당하게 진행된 조선의 위성발사” 문제를 안보리가 상정논의한 것 자체가 북한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조선 인민의 존엄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라는 것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대처해 부득불 자위적 억제력 강화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 통신은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억제력 강화를 위해 무기화하는 데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이룩됐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는 밝히지 않았음. 북한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성 김 국무부 북핵특사와 접촉을 가진 후 북한 외무성이 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을 통해 미국에 다자회담에 앞서 먼저 북·미 양자회담을 갖는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 3일 중앙통신이 재처리 완료와 핵무기화 성과를 거듭 주장하고 나선 것은 미국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채취공업부문 성과를 전하는 기사에선 “각지 우리나라 광산에서도 위훈이 창조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게 될 경수로 발전소의 핵연료를 원만히 보장하려는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양양된 열의와 즐기찬 노력투쟁에 의해 우리나라 광석 생산에서 획기적인 성과들이 이룩됐다”고 경수로 발전소의 자체 건설 주장을 거듭 상기시켰음.
- 이는 평화적 핵이용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자신들의 핵무기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역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양자회담의 시급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됨.

● 엘바라데이 “북핵 해결 위해 대화해야”(11/3)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대신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일 전함. 이번 달에 임기가 끝나는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2일 자신의 마지막 유엔 총회 보고에서 “북핵 대화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국제사회의 해결 노력도 난관에 빠졌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IAEA가 핵 비확산에 관한 북한의 의무 불이행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한 지 16년 만에 북한은 미신고 플루토늄을 일부 보유한 상태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며 “이는 현재의 핵 비확산 체제가 견고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지적함.
- 이어 그는 “북한과 이라크의 예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외교와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의견이 다른 상대를 고립시키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 IAEA나 유엔 안보리와 같은 “국제기구의 참여 아래 사실에 근거해서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지 곧바로 무력에 의존하거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행동해선 안된다”고 강조함.

나. 미·북 관계

● “北, 북미대화 여러 차례 원해” <니혼게이자이>(11/8)

- 북한과 미국의 북미 대화 물밑 교섭 과정에서 북한측이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양측 고위급 대화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할 것을 요구했



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복수의 북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8일 전했다.

- 신문에 따르면 물밑 접촉에서 미국측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 폐기를 명기한 2005년 6자회담의 공동성명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면 협상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6자회담 이전에 열리는 북미 대화에 대해 북한은 '4~5회'를 예로 들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 그러면서 신문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론하면서 복수에 걸친 대화를 요구한 것은 휴전 상태에 있는 한국 전쟁을 전쟁 종결을 의미하는 평화협정 체결로 바꾸는 등의 논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스타인버그 “메시지전달 위해 북미접촉 가능”(11/7)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6일 빠르면 이달 말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대화가 협상이 아니라 비핵화 메시지 전달을 위한 차원임을 강조했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미국진보센터(CAP)에서 열린 행사에서 북미대화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과의 양자 논의들(discussions)에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이 논의들이) 이슈들에 대한 협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것에 대한 논의는 (북한의) 6자회담의 복귀를 통해 이뤄진다”고 거듭 확인했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기반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과의) 논의의 목적이어야 하며, 6자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두 가지 기본 원칙에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합의했다고 전했다.
- 또 미국은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와 6자회담 복귀라는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적절한 때에 (북미 대화를) 준비할 것”이라면서 “(비핵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접촉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 “美, 북미양자대화 무한정지속 원치않아”(11/7)

- 미국 정부는 늦어도 연내에는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대화를 시작하더라도 양자 대화를 오래 지속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6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미대화의 개최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회담이 성과 없이 무한정 가는 것은 아무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도 이 협의가 무한정 지속되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미국은 북미대화를 가진 후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북미대화 횟수를 (한차례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대화가 지속되는 것은 선호하지 않으며 가급적 빨리 6자회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북한의 북미대화 후 6자회담 복귀 보장 여부와 관련, 이 당국자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미국이 북미대화에 나가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북미대화 후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한다는 게 담보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들이 있지만, 6자회담이 열릴지는 아직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 성 김 미국 6자회담 특사와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최근 북미 접촉 결과와 관련, 이 당국자는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상호의 뜻을 알았을 테지만 세부 이슈들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서로 대화를 할 경우 일정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무슨 담보나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북한이 6자회담이 아닌 다자회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다자회담에는 가겠지만 6자회담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주장을 북한이 논리를 세워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그렇게 얘기할 틈을 주는 것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자회담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도 의장국으로서 강하며, 러시아, 일본도 마찬가지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대화에서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요구와 관련 “북한은 모든 문제의 출발이자 핵문제를 탄생시킨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적대시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은 북한 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답은 하겠지만 북한 논리를 따라가며 협상할 순 없다”고 했다.

● ‘보즈워스 방북’ 오바마 순방전 발표(11/7)

- 미국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북한 방문 문제를 다음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문제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전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곧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라도 발표할 수 있다”고 언급, 빠르면 7일 중 관련 발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11일부터 한·중·일 3개국 방문 및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석차 아시아 순방에 나설 예정이어서 북미대화와 관련한 미국의 발표는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 고위 관계자는 보즈워스 대표의 구체적 방북 시점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해 오바마 대통령의 귀국 직후 방북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음.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19일이나 20일 돌아온다”고 지적했음.

-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부터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조지프 도너번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보즈워스 대표, 성 김 6자회담 특사 등과 잇따라 만나 북미대화 문제를 조율했음. 켈리 대변인은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을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6자회담 재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의 완전한 이행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음.

● 베이더 “美, 北과 직접대화할 준비”(11/7)

-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북한과 직접적인 개입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북·미 대화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동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음.
- 베이더 보좌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간접적으로 혹은 여과장치를 통해 얘기를 듣기 보다는 적대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로부터 직접 얘기를 청취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북·미 대화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 베이더 보좌관은 “6자회담 프로세스가 올바른 틀이고, 비핵화가 (회담의) 의제가 돼야 하며, 2005년 (9.19) 선언이 여전히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북한이 이해하고 있다는 진정한 신호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평양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갖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음.
- 그러나 그는 “양자회담은 6자회담과 기존의 관련된 합의가 전제된 맥락에서 열려야 한다”고 미 행정부의 기존 입장이 되풀이 강조한 뒤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며, 영변을 3번째로 사는 일도 없을 것이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에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갖지 못했다고 생각해 왔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동맹국과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해 북·미 대화 추진과정에서 한국, 일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임을 강조했다.
- 베이더 보좌관은 또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한국과 미국 관리들이 한·미 FTA의 두드러진 차이점을 좁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베이더 “오바마, 한국에 각별한 관심”(11/6)

-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더 보좌관은 내주 이뤄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순방을 주제로 이날 오전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미 관계는 현재 견고한 토대 위에 서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베이더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 핵문제가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북한과 직접적인 개입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며, 영변을 3번째로 사는 일도 없을 것이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에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갖지 못했다고 생각해 왔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동맹국과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 베이더 보좌관은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현재 한국과 미국의 관리들이 한·미 FTA의 두드러진 차이점을 좁히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오바마, 北 인권을 말하라” <WSJ>(11/6)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18~19일 한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고 멜라니 커크패트릭 전(前) 월스트리트저널(WSJ) 부편집장이 주장함. 미국에서 보수 논객으로 통하는 커크패트릭은 6일자 WSJ 기고문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지도부와 직접 대화에 나선다면 폄박받는 주민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함.
- 특히 이달 오바마 대통령의 서울 방문은 북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은 기회”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의 옹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그는 2천300만 주민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압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면서 최근 비릿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미 국무부의 종교자유 실태 보고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하와이 동서문화연구소 보고서 내용을 인용함.
- 그는 먼저 북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900만명이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국제사회 지원도 고갈됐다고 전함. 덩달아 대북 인권단체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오는 겨울 북한의 기아 확산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함.
- 또 북한이 국무부 보고서에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9년 연속 지정됐다고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소개함. 그는 아울러 북한이 약 20만명 규모의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경제범



수용소까지 만들어 폭력과 수탈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함. 커크패트릭은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방문 중 탈북자를 만나 북한의 인권상황을 듣거나 대북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메시지를 던질 것을 제안함.

● <북·미대화 美결정 임박>(11/6)

- 북한과 미국간의 양자대화와 관련한 미 정부의 결정이 임박한 모양새임.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특사와 북한 외무성 리 근 국장간의 지난달 말 뉴욕 및 샌디에이고 접촉 결과에 대한 미국 내부의 검토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5일 알려짐. 미 정부 안팎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주 아시아 순방에 앞서 북·미대화 여부에 대한 미국의 결정이 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상태임.
-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함에 따라 북·미접촉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책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클린턴 장관은 이날 해외순방 결과 보고차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별도로 만나기도 함. 또 외교안보 관련 장관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가 오바마-클린턴 회동 이후 백악관에서 열림. 이에 따라 이들 자리에서 다음주 아시아 순방 대책과 북·미대화 문제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됨.
- 앞서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 연합뉴스 라이브 인터뷰에서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기는 미측이 조만간 (북·미대화와 관련한) 입장을 정할 것 같다는 내용”이라고 전함.
- 미국의 결정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위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에 도착, 2박3일간의 방미 일정에 들어감. 위 본부장은 이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 김 특사 등을 만난 것을 비롯해 방미 기간에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등 국무부, 국방부 및 백악관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미국측 기류를 파악하고 북·미대화 문제와 관련한 한·미간 조율을 벌일 예정임.
- 이와 관련,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 향후 조치들을 숙고중”이라고 전함. 일단 미국은 북·미대화를 갖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임. 리 근 국장이 2005년 9.19 공동성명 및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담은 2007년 2.13 합의의 재이행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6자회담 복귀에 신축적 입장을 보이고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의 면담 가능성을 밝히는 등 어느 정도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 때문임.

● “北·美대화, 오바마 亞순방후 2회 예상”<CSIS>(11/5)

- 북한과 미국의 양자대화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와 아시아 순방이 끝난 뒤 2차례



에 걸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여) 선임 연구원은 5일 워싱턴 D.C. CSIS 회의실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 아시아 순방 미디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힘.

-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최근 샌디에이고 북·미접촉에서 미국은 스티븐 보즈워즈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북한에 보낼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면서 “북·미대화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2차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함. 이런 전망에 대해 그는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회담이 2차례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6자회담 참가국들에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 하지만, 북·미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는 한 검증 문제 등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지적함. 이에 따라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려면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등 대북제재 방침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등 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 등을 제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없다고 본다”고 말함. 이와 함께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6자회담의 미래와 관련, 북한의 태도가 매우 미온적이라고 분석함.
-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의 김 위원장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북·미 양자회담 진전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6자회담은 김 위원장에게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회담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분석함.

● “北김책공대 총장 이달말 방미”<RFA>(11/4)

-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홍서현 총장이 학술교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9일 미국에 도착해 시라큐스대학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전함. RFA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홍 총장을 포함한 4명의 김책공대 대표단은 뉴욕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함.
- 김책공대 대표단은 최근 북한 당국으로부터 방미 승인을 받고 미국 무부에 신청한 입국 비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시라큐스대는 지난 2001년부터 정보기술(IT) 부문을 중심으로 김책공대와 교류하고 있으며 두 대학의 과학자들은 서로 수차례 상호방문하면서 공동 연구사업을 하고 있음.

● “北, 美 의원단 방북도 요청”(11/4)

- 북한이 미국에 대해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함께 미국 상·하원 의원단의 북한 방문도 타진했다고 일본 산케



이(産經)신문이 미·일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4일 전함. 신문에 따르면 미국측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 관련 시설 공개를 방북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이 이런 제의를 한 것은 북·미 간 고위급 대화를 위한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더라도 의원단과의 접촉을 통해 북·미간 직접 대화의 실마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미·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 의원단 초빙은 북한측이 양자 간 직접대화를 미국측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거론됐음. 북한측은 하원 의원단의 방북에 이어 상원 의원단의 방북도 요청함.
- 이와 함께 신문은 미국 정부 내에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에 대해 신중론도 적지 않아, 북·미 간 물밑접촉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아버지 부시 “北 전체주의 오래 못갈것”(11/4)

-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힘. 부시 전 대통령은 2일 밤 방영된 폭스뉴스 ‘온 더 레코드’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지구상에 공산주의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북한에서도 그런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그곳(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이런 엄격한 전체주의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한편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와 함께 20년 전 베를린 장벽 붕괴를 이끌었던 부시 전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직전까지도 “실제로 장벽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올지는 확신하지 못했다”고 말함.
- 그는 ‘베를린 장벽 붕괴의 영웅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과 콜 전 총리”라고 주저없이 두 사람을 영웅으로 꼽았음. 부시 전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콜 전 총리 등 베를린 장벽 붕괴를 이끌었던 주역 3명은 지난달 말 베를린에서 만나 당시 상황을 회고하고 의미를 되새겼음.

● 러 “북·미 관계 개선 모색 비현실적”<AFP>(11/4)

- 북한 문제에 정통한 러시아의 한 외교관은 3일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북한은 6자회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함.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평양 당국은 북·미간 적대적 관계를 정상적, 우호적, 협력적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단시일내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힘.
- 러시아 측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2일 “미국이 아직 우리와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도 그만큼



제 갈 길을 가면 될 것”이라며 북·미 양자회담의 조속한 호응을 촉구한 이후 나온 것임. 이 외교관은 “러시아는 북·미 관계 개선이 6자 회담의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또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6자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그는 이어 “북한은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이자 역사적인 파트너”라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큰 경제적 잠재성을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음.

● “북·미 2차례 공식회담 개최 합의” <FP>(11/4)

- 북한과 미국은 북한이 다자회담에 복귀하기 전에 양국간 두 차례의 공식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3일 보도함. 이 같은 합의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리 근 미국국장과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성 김 대북특사간의 협상에서 이뤄졌다고 포린폴리시가 북·미 협상에 밝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전함.
-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북한의 다자회담 복귀전 2차례 양자회담 개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면담 허용 ▲2005년 9.19 선언 준수 및 조속한 핵프로그램 포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 복귀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함. 이에 대해 북한은 “양자회담의 결과가 잘 났을 때 다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종전의 입장과 달리 다자회담 복귀전 2차례 양자회담 개최에 동의했고, 보즈워스 대표의 협상상대를 강석주 제1부상으로 격상하는데도 별다른 이견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임.
- 그러나 북한은 3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구상이라는 토대 위에서 회담을 재개하고 싶다고 반대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북한의 이런 입장은 자신들뿐 아니라 남한의 핵무기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한 셈이라고 포린폴리시는 전함.

● 리근 “핵보유국 인정 요구 아니다”(11/4)

-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북·미간 토론회에서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냐’는 미국측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이 방송은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 “정통한 미국의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함.
- 북한은 외무성 성명이나 관리들의 발언, 언론매체 보도 등을 통해 ‘핵보유국’이라고 자임하면서 정치수사적으로는 미국과 핵협상을 동등한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 회담으로 끌고 가려는 뜻을 시사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음. 이 토론회에서 북측 대표단은 특히 미국의 대북 투자에 강한 관심을 나타냈다고 소식통은 설명함.

- 소식통은 “북측 대표단이 예를 들면 개성공단 확장 등과 관련해 미국측 투자가가 북한을 방문하는 데 대해 매우 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히고 북측은 북·미간 학술·문화 교류에도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북한 김책공대와 미국 시라큐스대간 학술교류와 내년초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답방 공연 등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서헌 김책공대 총장이 다른 일행 3명과 함께 오는 29일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 국무부에 입국 비자를 신청했으며, 홍 총장 일행은 시라큐스대는 물론 뉴욕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보도함.
-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만 걸림돌은 역시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한의 핵 문제”라며 “토론회에선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하고 9개월동안 기대와 달리 북·미간 대화와 관련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은 데 대한 솔직한 아쉬움도 피력됐다”고 말함.

● 위성락 “美, 조만간 북·미대화 입장 정할것”(11/3)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 북·미 양자대화에 대해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기는 미측이 조만간 입장을 정할 것 같다는 내용”이라고 말함. 위 본부장은 이날 아침 서울 종로구 도림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 라이브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을 초청한 지가 꽤 됐기에 미측이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그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전날 보도에 언급,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 언급은 좋지 않은 행보”라며 “북·미 양자회담에 도움이 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함. 위 본부장은 “다만 이미 9월 초에 그와 유사한 내용이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전혀 예측하지 못하거나 놀라운 일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그 임팩트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단정 지어 말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 그는 5일부터 시작될 미국과 일본 방문에 대해서는 “가게 되면 보즈워스 대표와 성 김 특사,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의 항상 접촉하던 상대역들과 이야기하려 한다”며 “당면한 북·미접촉 얘기를 좀 하게 될 것이고 11월 중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위 본부장은 또 “북한이 대화과정에 나올 때 협상하는 방안으로 ‘그랜드 바겐’ 아이디어를 대통령이 제시해 놓고 있다”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성안하기 위한 노력을 양자 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이번에 미국이나 일본에 가게 되면 그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제재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제재를 유지하는 한편, 협상과정을 성사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이 성사되려면 국내적으로 단합된 입장에 따라 국민의 지지가 모여야 하고 국제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스티븐스 “北과 관계정상화 고려할 때 아냐”(11/3)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3일 “미국은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고려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고 밝힘.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바마 정부의 스마트외교와 한반도 평화정책’을 주제로 한 초청강연에서 “북한이 계속 핵프로그램을 보유한다면 관계 정상화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그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의 핵뿐만 아니라 미사일 기술 수출 방지를 위해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스티븐스 대사는 “지금도 미국은 여전히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과) 양자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분명한 점은 이 문제가 미국과 북한 양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자간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함. 그는 “6자회담이 중요한 이유는 2005년 9.19공동성명이 한반도의 비핵화,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지원, 평화협정 체제 등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다 담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26일 성 김 특사와 리 근 국장의 뉴욕 회동을 계기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함.
- 스티븐스 대사는 또 “미국은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이 북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 그는 “지난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체코 프라하 연설은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핵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북핵 정책은 이러한 세계적인 핵 정책의 일부”라고 말함.

● 美 “북·미 매우 유용한 논의”(11/3)

- 미국은 2일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방미 기간 이뤄진 북·미간 접촉이 매우 유용했다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성 김 특사와 리 근 국장간에 지난달 24일 열린 뉴욕접촉과 관련, “성 김 특사가 매우 유용한 논의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켈리 대변인은 “이번 논의들은 6자회담 재개라는 당장의 목표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유용한 접촉이었다”고 말함. 그는 “성 김 특사가 리 근 대사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음.
- 이런 언급은 리 근 국장의 방미를 통해 이뤄진 북·미간 접촉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미 정부의 공식 평가 중 가장 긍정적인 것임. 특히 이번 언급은 북·미간 일련의 접촉 결과에 대해 미 정부 내에서 긍정적인 입장 정리가 이뤄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이달 하순에는 이



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여부가 주목됨.

- 하지만 켈리 대변인은 이번 북·미 접촉이 어떻게 유용했는지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음. 켈리 대변인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문제에 대해서도 “보즈워스 대표의 북한 방문에 대한 초청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즈워스 대표가 방북 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함.
- 그는 결정이 이뤄지면 이를 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음. 그는 또 미국에 양자대화를 촉구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이날 언급이 6자회담 등 다자회담 재개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그것(6자회담 재개)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로 이끌 수 있는 6자회담 재개”라고 밝힘.
- 하지만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 외무성 대변인 언급에 대한 반응은 내놓지 않았음. 그는 이어 “우리의 정책은 분명하다”면서 “(6자회담의 나머지) 4개 파트너들과의 완전한 협의가 이뤄지고, 6자회담 재개라는 맥락에서 이뤄진다면 우리는 양자적 맥락에서 북한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으며, 우리는 이 정책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고 강조함. 그는 북·미대화 후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약속을 기다리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함.

● 北외무성, 美에 양자대화 “결단” 촉구(11/2)

- 북한 외무성은 2일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당사자들인 조미(북·미)가 먼저 마주앉아 합리적인 해결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에 대해 북·미간 양자회담에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함.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가 아량을 보여 미국과 회담을 해보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이제는 미국이 결단을 내릴 차례”라며 이같이 밝힘.
- 그는 “조미 사이에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게 될 것”이라며 북·미 양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점임을 강조함.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아직 우리와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도 그만큼 제갈 길을 가면 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북·미 양자회담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핵억제력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함.
- 그는 리근 미국국장이 미국을 방문, 제20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하고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성 김 북핵특사와 접촉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 접촉은 조미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아니었고 따라서 접촉에서는 조미대화와 관련되는 실질적인 문제가 토의된 것이 없다”고 주장함. 그는 북·미 양자회담 후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 개최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우리의 입장은 조선반도



비핵화가 실현되려면 조미 적대관계가 청산되어 우리의 핵보유를 산생시킨 근원을 완전히 없애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이고도 타당한 요구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말함.

- 외무성 대변인은 또 “지난 6년간에 걸치는 6자회담 과정은 조미 사이에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지 않는 한 6자가 아무리 회담을 해도 그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해 줬다”며 “미국이 유독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만을 한사코 걸고 들다 못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가 제재를 발동시킴으로써 9.19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인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은 말살되고 성명은 무효화됐다”고 주장함.
- 그는 “우리 공화국(북)의 정치적 자주권이 유린당한 것은 물론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1980년대부터 추진하던 흑연감속로에 의한 원자력발전소들의 건설을 중지했으나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됐던 2기의 경수로 제공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영변 핵시설 무력화에 따른 경제적 혜택도 입은 것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다. 중·북 관계

● 中 “北·美 접촉 환영”(11/5)

- 중국은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 접촉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힘.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 “우리는 북·미 접촉과 북·미간 관계 개선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함.
- 마 대변인은 “우리는 북·미간 접촉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 달성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고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마 대변인은 그러나 리 국장이 이틀간 베이징에 머물면서 중국 관리들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리 국장은 10박 11일간 미국을 방문해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 북핵특사와 비공식 접촉을 가진 뒤 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5일 오후 고려항공편으로 귀국함.

● 北대표단 “중국 종속 원치 않는다” <美전문가>(11/5)

- 지난달 뉴욕에서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참석했던 가운데 열린 북한토론회에서 북한 대표단은 “우리는 전적으로 중국에 종속되길 원치 않는다”며 한국, 미국, 일본 등과 경제교류 확대를 희망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전함. 이 방송은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터티가 지난달 30일 공동주최한 북한 토론회에참석한 북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함.

- 익면을 요구한 이 전문가는 “북한이 중국에만 너무 의존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는 점”을 토론회에서 매우 흥미로웠던 대목으로 소개하면서 “북한 대표단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과 경제적인 교류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북한 대표단은 “북한에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서 투자하는데, 그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중국에 종속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이 전문가는 소개함.
- 이 전문가는 당시 토론회에서 “미국과 북한간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전체 논의의 우선순위가 중점이었다”며 “북한은 미국과 전략관계의 수립을 희망했다”고 설명함. 이 토론회에 참석했던 뉴욕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박사도 북한 대표단의 발언중 미국과 관계개선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고 4일 밝혔다고 RFA는 덧붙였다.

● “北군부, 對中 광물수출 직접 챙겨”<WP>(11/3)

- 북한에서 군부가 경제부문에 관한 거의 완벽한 통제권을 장악해 중국에 광물자원을 수출해 외화를 버는 수익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핵개발 재원을 조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배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WP)가 3일 서울 발로 보도함.
- 이 신문은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최신 분석을 인용, 북한의 인민군이 북한 내 거의 모든 일상생활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곡물의 수확기에는 병사들을 배치, 모든 식량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다고 전함.
- 북한 군부는 특히 이란과 파키스탄, 시리아 등에 미사일과 무기를 판매해 수억달러를 벌어들였지만 두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유엔 제재에 직면하면서 무기 수출이 어렵게 되자 군부가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자원의 대(對)중국 수출을 담당할 국영기업을 장악해 수익을 챙기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고안해냈다는 것임.
- WP는 통일부의 추정치를 인용해 북한 부존 광물자원의 총 가치가 5조9천400억달러(한화 7천조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제조업 생산현장에 필요한 주요 광물자원을 전세계로부터 매년 엄청난 규모로 수입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군부의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생겨나는 수익규모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라고 전함.
- 실제로 북한의 대 중국 광물수출액은 2003년 1천500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억1천300만달러로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과의 총 교역액도 1990년 이후 최대를 기록함. 미 의회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중국으로의 광물 수출을 통해 확보된 외화로 핵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한편 엘리트층의 충성심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WP는 보도함.

- 군부는 각 부처와 노동당을 제치고 외화벌이에 통제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수확기에는 국영농장에 트럭을 보내 연간 곡물생산량의 4분의 1을 챙기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함.

● 北 공군대표단 訪中(11/3)

- 북한 공군 부사령관 김광수 소장이 이끄는 공군대표단이 중국 공군 창설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3일 베이징에 도착함. 김광수 소장 일행은 이날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의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한후 북한 대사관으로 향함. 북한 공군대표단은 중국 공군 창설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6일 열리는 ‘공군평화발전포럼’에 참가하고 중국 공군과 교류 방안을 논의함.
- 세계 25개국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34개국 공군 대표단이 참가하는 이 포럼에 한국대표로 이계훈 공군 참모총장이 참석함. 중국은 오는 11일 공군 창설 60주년을 맞아 베이징근교에서 신예 전투기와 공중조기경보기, 그리고 폭격기 등을 전시함.

● 北-中 관계 복원에 北 변경관광 활기(11/3)

- 최근 들어 중국 단둥(丹東)을 통해 북한 변경관광에 나서는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음. 이달 초 국경절 황금연휴 이후 단둥에서 하루짜리 북한 변경관광에 나서는 중국 관광객이 하루 평균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단둥일보가 3일 보도함.
- 신문은 국경절 연휴를 끝으로 전통적 관광 비수기에 들었음에도 북한 변경관광을 위해 통행증 발급 신청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들어 변경관광객이 1만1천여 명에 이른다고 전함. 북한 변경관광은 신분증만 제출하면 통행증을 발급받아 하루 코스로 신의주 등 북한 접경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것으로, 관광객들의 북한 내 도박을 문제 삼아 중단시켰던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북한 변경 관광을 재허용함.
-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긴장관계가 조성되면서 올여름까지만 해도 이용객이 하루 10~20명에 불과함. 단둥의 한 여행사는 “중국 내에서 핵실험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올 상반기에는 뜸했는데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으로 북·중관계도 누그러지면서 관광객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말함.

라. 일·북 관계

● 하토야마 “평양선언은 北이 위반..무의미”(11/4)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북·일 국교 정상화와 관련, “북한이 ‘평양선언’(2002년 일본 고이즈미 당시 총리의 방북 때 합의한 수교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선언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함.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東京) 총리공관에서 주일 대사를 지낸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와 가진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4일 보도함.

- 평양선언은 2002년 9월 방북한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서명한 것으로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 재개 ▲교섭과정에서의 납치문제 진전 ▲국교 정상화 후 일본의 대북 경제 지원 등에 대한 원칙을 담고 있음. 하토야마 총리는 그러나 “일본 정부로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라야 국교정상화 교섭에 들어간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국교정상화의 프로세스 가운데서 하나씩 해결해가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함.
- 그는 “그러나 아직 북한으로부터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없다”고 덧붙였음. 그는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북·일관계 정상화 교섭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던 이전 일본 정부 입장이 다소 유연해졌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돼 주목됨. 미·일관계와 관련, 하토야마 총리는 “포괄적인 리뷰를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의 의지에 따라가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해왔고 미국에 앞서 외교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 그는 “이제 이런 ‘종속적 외교의 자세’를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며 “미국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할 말은 하겠다”고 강조함. 하토야마 총리는 이밖에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허용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북한 핵 보도 과장 말아야”(11/6)

- 러시아 외무부는 6일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위해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보도는 새로운 뉴스가 아니므로 지나치게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음. 러시아 외무부의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무기화했다는 보도는 대화 개시를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음.
-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조치가 현 상황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극적으로 과장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음.

바. 기타

● 탈북자단체 “ICC에 김정일 제소할 것”(11/7)

- 탈북자 지원 및 북한 인권개선 활동을 벌이는 사단법인 열린북한(대표 하태경)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반(反) 인류범죄’ 용의자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로 했음. 그러나 북한이 ICC 설치 근거인 ‘로마조약’ 비준국이 아니어서 ICC 검찰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수사,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

-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인 정광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등과 유럽을 방문 중인 하태경 열린북한 대표는 6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를 방문, ICC검찰 관계자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소 문제 등을 논의했음.
- 하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ICC 검찰은 우리가 사건(case)을 접수시키면 곧바로 예비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하면서 “다음달 중에 고소장을 접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음. ICC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예비조사를 벌여 사건의 성립 여부, 관할권 여부 등을 고려해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됨.
- 김정일 국방위원장 고소 건에 대해서는 예비조사에서 “관할권 없음” 결론이 내려질 것이 확실시됨. 하 대표는 “이러한 한계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ICC 검찰이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관할권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예비조사 결론에 담길 문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했음.
- 하 대표는 “북한이 로마조약 비준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ICC가 움직일 수 있다”라며 “유엔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납북자송환, 獨 ‘프라이카우프’ 방식 검토”(11/6)

-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6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와 관련, “독일이 했던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지만 그 방식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힘.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한국판 프라이카우프’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함. 프라이카우프 방식은 서독이 독일통일 전 동독 정치범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환 및 상품 등을 동독에 제공한 것을 뜻함.

● 李대통령 “원칙없는 남북정상회담 안해”(11/6)

-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과 관련, “거듭 말하지만 만남을 위한 만남, 원칙없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함.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자문단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보도가 나오는데 혹시 회담이 열린다면 북핵과 인권이 의제가 돼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조언을 듣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함.
- 참석자들은 또 “그랜드 바겐과 같은 의미인 일괄타결 방식은 원래 북한이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북한도 내심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



닌가 하는 느낌도 있다”고 분석함.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나는 패 키지 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미국 측에서 이를 그랜드 바젠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화답한 것”이라며 “우리는 큰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그랜드 바젠 내용은 6자 회담 참가 5개국에 협의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설명함.

- 국격 업그레이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을 생색낼 생각은 전혀 없다.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서 다음 정부가 탄탄대로를 달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내 철학”이라며 “그러다 보니 생색은커녕 욕먹는 일만 손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함.
-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데 걸맞게 모든 분야에서 국격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지난 3월 호주 방문 때 참전용사비를 참배하다가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세계 어디에든 간다’는 글귀에 감동을 받았다. 한국도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中에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할 것”(11/6)

-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 후보자는 5일(현지시간) 자신이 특사에 취임하면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추방과 강제 복송을 하지 말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킹 후보자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 “만약 상원 인준을 받게되면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말함.
- 킹 후보자는 중국 정부는 유엔난민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탈북자를 추방하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해서는 안되는 것 등을 포함해 협약 준수 의무가 있다고 상기시키고,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의 유엔난민 최고대표사무소(UNHCR) 접근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는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 93명의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했다면서 특사에 취임할 경우, 탈북자들의 미국내 정착을 비롯해 망명희망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 및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인권침해 국가”라고 규정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방안으로 대북 방송 확대를 통한 북한내 외부정보 유입을 촉진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힘.
- 킹 후보자는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쟁포로 및 납치자, 일본의 납치자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미국의 파트너들을 지원하는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함.
- 킹 후보자는 의회 근무 기간 25년 중 24년을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 등에 기여한 대표적인 지한파 고(故) 톰 랜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했고,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 발의에 관여하기도 함.



● 李대통령 “북핵해결없이 남북협력 한계”(11/4)

-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함. 이 대통령은 이날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기조연설에서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는 동북아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지속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협력의 큰 장애 요소인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힘.
-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도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핵 문제 해결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해결에 나서지 않는 한, 남북관계 진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됨.
-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이 제안한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거론, “일괄타결 방안에 대해 이미 6자회담 참여국들 간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이 포기하면 원하는 것이 뭔가 확인해 협상하자는 것으로 아주 현실적인 제안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이 대통령은 이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협상을 오래하면 오바마 미 대통령 임기가 다 돼서 바뀌고, 한국 대통령도 바뀌고, 중국 국가주석도 바뀌고, 그러면 또다시 할 거라고 생각한다. 무한정 다시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복귀해 일괄타결 방안 등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함.
-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과거에는 시간이 주로 북한 편이었을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북한 쪽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한·미·일 정권이 바뀌어도 물샐 틈 없는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북한이 판단을 잘못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말함.
-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 이 대통령은 “아직도 경기 회복에 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올해 4분기에도 한국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해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함. 그러면서 “국제유가와 기타 원자재 가격 등 세계경제의 불안요인 등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업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이 대통령은 이른바 출구전략에 대해 “각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출구전략의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사전에 합의된 일반원칙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면서 “조급하게 출구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소위 ‘더블딥 리세션(double-dip recession)’을



경험한 역사적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힘. 이 대통령은 “나는 근본적으로 세계통상이 자유롭게 확대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FTA(자유무역협정)를 지지하고 있다. DDA(도하개발어젠다)가 되면 좋겠지만 그 전에 FTA가 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조금 뒤쳐져 있으므로 잠시 어려움을 겪을지는 모르지만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FTA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냄.

- 이 대통령은 한국이 내년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소개하면서 “G20에 속하지 않는 많은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내년 중반 이후 세계경제는 현 경제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관리 체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함.

● <英 의사당서 北인권유린 실태 증언>(11/4)

- “지금도 잠만 자면 수용소에 잡혀간 악몽 때문에 몸서리가 쳐져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3일 저녁(현지 시간) 영국 런던 웨스터민스트 의회 포트컬리스 하우스에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가 탈출한 정광일(46), 이성애(53.여)씨가 수용소의 인권유린 및 고문 실태를 생생히 털어놓아 참석자들을 놀라게 함.
- 국제 기독교 단체인 CSW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정례검토(UPR)를 한달여 앞두고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해 마련됐음.
- 정광일씨는 조선평양무역회사 청진지사장으로 일하던중 1999년 간첩혐의로 국가보위부에 체포돼 2000년 4월부터 3년동안 북한의 대표적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수용소에 수감됐음. 그는 수용소에서 석방된 뒤 탈북해 2004년 4월 한국에 입국함.
- 정씨는 “요덕수용소에서는 강제노동을 하는데 하루 1인당 350명의 밥을 모두 김을 매면 600g의 식량이 배급되고 노동량의 절반만 채우면 절반의 식량이 배급되고 작업량이 적으면 아예 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함. 그는 “수용소에서는 때리는 것 이외에 합법적으로 수감자를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작업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굶기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성립돼 아버지가 아들의 밥을 빼앗아 먹는 곳이 바로 요덕 수용소”라고 강조함.
- 정씨는 “수감자 대부분이 오랜 취조 과정에 몸이 허약해져 힘든 노동을 견딜수 없고 배급을 받지 못해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전함. 함께 증언대에 선 이성애씨는 남편이 죽은뒤 살길이 막막해 중국의 연길교회를 찾아갔다가 돌아왔는데 밥 짓는 냄새를 맡고 옆집에서 신고하는 바람에 보위부에 끌려감.
- 함흥시 9호 교화소에서 4년간 수감생활을 했다는 그는 “하루 18시간 노동을 하고 밥먹는 시간은 고작 20분에 불과했다”며 “아침 5시30분



에 기상해 차를 타고 30km정도 떨어진 산으로 가면 7시30분쯤 강냉이 죽과 맹물을 갖다주고 하루종일 노동을 시킨뒤 오후 7시에 저녁을 먹고 교화소 규칙을 외운뒤 10시에 취침했다”고 전함. 그는 “굶주림으로 하루에도 30~40명씩 죽어나가는 것을 봤고 어떤 할아버지는 밥을 먹다 죽었는데 사람들이 입속에 있는 밥을 먹으려고 싸우기까지 했다”며 믿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교화소 상황을 증언함.

- 이들 2명의 탈북자를 포함해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 등은 영국 방문기간중 윌리엄 헤이그 보수당 외교위원장, 케롤라인 콕스 의원, 데이비드 앨턴 의원 등을 면담해 북한의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함. 이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들을 만난뒤 귀국할 예정임.

● 北 “인권문제, 협조정신으로 다뤄야”(11/3)

- 유엔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가 지난달 28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64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유엔 차원의 대북 인권결의를 겨냥해 “대결이 아니라 협조를 도모하는 정신에서 인권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3일 보도함. 북한 대표는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원칙의 하나로 이같이 주장하고 유엔인권이사회와 3위원회에서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 “냉전시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세력들이 여전히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들”이라거나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반발함.
- 북한 대표는 또 “인권 분야에서 국가자주권 존중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면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을 들어 “국가자주권이 침해되는 국가나 영토에선 예외없이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주장함. 북한 대표는 이와 함께 “과거 인권유린 무제를 바로 해결해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비판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내년 G20, 한-미FTA. 글로벌 코리아 기회”(11/6)

- 한·미 양국은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양국간 최대 현안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의해 제기됐음. 특히 CSIS는 한국의 G20 정상회의 유치에 이명박 대통령의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성취하는 유례없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평가함.



- CSIS는 5일 금융위기 이후 한·미 동맹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2010년은 G20 정상회의를 활용해 한·미FTA 진전과 안보 및 동맹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면서 이같이 밝힘. 이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아시아의 부상,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국제경제협력 등 갈수록 중요한 현안들의 중심에 있다”면서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양국협력은 21세기의 진정한 전략적 동맹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하지만 G20 정상회의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한·미FTA 최종 타결에 실패하면 미국은 동맹관계와 리더십에서 크게 후퇴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함. 미국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여부는 세계무역기구 도하라운드 협정체결을 추진중인 오바마 대통령의 지도력을 아시아국가들이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임.
- CSIS는 한·미FTA가 주춤거리는 사이 한국과 유럽연합(EU)이 FTA를 체결한 것은 앞으로 세계 국가들 간에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질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한·EU FTA 체결이 미치는 영향에도 비상한 관심을 보임. 보고서는 한국과 EU의 경제력을 합치면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 국가들의 경제보다 더 크다면서 만약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한국과 EU의 3개 경제권을 통합하는 미·한·EU 경제무역동반자관계(ETP)를 형성한다면 당분간 어느 국가들의 FTA도 이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함.
- 이와 함께 CSIS는 “미·한·EU ETP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3개 경제권을 묶어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와 법치주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바탕을 둔 발전모델로서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인터뷰> 빅터 차 美 조지타운대 교수(11/5)

-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의 위기 조장 전술에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5일 북한이 최근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라는 위협 카드로 북·미 대화를 압박하고 나선 데 대해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함.
-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차 교수는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문가 세미나에 앞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해 ‘할만큼 했다’는 시각들이 적지 않다”며 “이제 북한이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강조함.
- 인터뷰에서 수차례에 걸쳐 한·미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한 차 교수는 한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건 지원 및 경호부대 파병 결정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관계가 글로벌 파트너로 한 단계 격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전담 연구원(Korea Chair)으로도 활동 중인 차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행한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우선 순위와 원칙’(Obama’s Asia Trip: Priorities and Principles) 제하의 특강에서 북핵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미, 미·일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힘.

다음은 차 교수와의 문답.

-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 ▲ 한·미 의회의 FTA 비준 문제가 될 것임. 미국은 ‘FTA의 원형(prototype)’으로 볼 수 있는 한·미 협정의 비준 실패시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적잖은 부담이 될 것임.
- 북핵 문제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말인가?
 - ▲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국내적으로 북핵 문제와 관련 더 이상 유화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된 형국임. 첫 핵실험 당시만해도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북한뿐 아니라 조지 부시 행정부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비난함. 하지만, 2차 실험 이후 이러한 견해들이 없다고 봐도 무방함. 현재 정부내에서도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봄.
-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 시기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인가?
 - ▲ 이미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상 간 논의할 주요 의제는 아닐 것으로 봄.
- 한국의 ‘아프간 파병’ 결정에 대한 추가 요구 가능성은?
 - ▲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에 고마워하고 있음. 미국이 설사 좀 더 원하는 게 있다하더라도 ‘동맹국에 대한 압박’ 인상을 줄 것을 우려해 입 밖에 내기 어려울 것으로 봄. 여하튼, 미국은 아프간 파병 결정을 계기로 한국을 글로벌 파트너로 여기는 등 양국 관계가 한 단계 진척될 것으로 기대됨.
- 한덕수 주미 대사가 최근 미 의회에 조속한 ‘KOR-US FTA’ 비준을 촉구했는데. 비준 전망은?
 - ▲ 비준 여부의 전망은 어렵지만 결국 이 문제는 백악관의 결단에 달려 있음.
- 의회 비준에 대한 백악관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뜻인가?
 - ▲ 그렇다기보다는 미국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국내경제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FTA 비준을 적극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그러나 미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만큼 백악관도 이제 한·미 FTA 비준 등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현안들을 챙길



것으로 봄.

-- 미국은 북한과 양자대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으로 보나. 미국은 추
가로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나?

▲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북·미 양자대화가 가능하
다는 입장이며 양자대화를 통해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가속화시
키는 것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으로 알고 있음.

--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인 인도가 과거 얻어낸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고 싶어한다는 시각이 있음. 미국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
정해줄 가능성은?

▲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봄.

-- 최근 성 김 미 6자회담 수석대표와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간
비공식 접촉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나?

▲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서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 붕괴 등 우발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우려한 바 있
는데. 한·미 또는 미·중 간 이에 대한 논의를 벌여왔는가?

▲ 중국이 북한을 의식해 이를 꺼리고 있어 미·중간에는 관련된 내용
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한·중·미 3국 간 이
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 특히, 한·미 양국은 김정일 국
방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봄.

-- 중국의 입장을 감안해 한국이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간접적인 3자
논의를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떠한가?

▲ 이상적인 아이디어이지만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의식해 응하지 않
을 것임.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핵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보지만 중국은 북한에 에너지 등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대북 영향
력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참가국 중 중국의 지렛대
가 가장 크다고 봄.

● 빅터 차 “한·미정상회담 최대의제는 FTA”(11/5)

-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5일 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한·
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차 교수는 이날 오후 한국국제교류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문가 세미나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원형
(prototype)으로 볼 수 있는 한·미 FTA의 비준 실패시 내년 한국에
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함.

- 차 교수는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우선 순위와 원칙(Obama’s Asia



Trip: Priorities and Principles)’ 제하의 특강에서 “이미 가서명된 한·EU FTA와 한·중·일 FTA 추진 상황이 오바마 정부의 비준 노력에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관건은 의회보다도 백악관의 결단이다”고 말함. 그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구체적인 무역정책을 제시하지 않아 이달 중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는 미국의 무역정책의 기조에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함.

- 북핵과 관련, 차 교수는 “미국은 그동안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과 상응하는 대가를 명확히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이 움직일 때”라고 강조함. 차 교수는 미·일관계에도 언급, “하토야마 정부의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재협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오바마 정부의 최대 도전거리다”고 말함. 그는 “워싱턴에서는 하토야마를 ‘신(新) 노무현’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로 참석자들의 웃음을 이끌어낸 뒤 “하토야마도 노 전 대통령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정권 초기에는 대미 자주외교를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과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낙관함.
- 하토야마 총리는 과거 정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편이며 과거 정권과 다른 것은 국내정치에서는 보여줄 수 있으나 외교정책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정권과 크게 달라질 수 없다고 그는 부연함.

● 샤프 “유엔사 한반도위해 계속 존재”(11/5)

- 월터 샤프 유엔군사령관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미연합사령부가 5일 밝힘. 샤프 사령관은 4일 일본 도쿄의 유엔군사령부 후방사령부에서 열린 제64차 유엔의 날(10.24)을 기념하는 환영연회 연설에서 “한국전쟁 당시 병력과 의료 지원을 해준 유엔 회원국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다”면서 그같이 말했다고 연합사 측이 전함.
- 그는 “유엔군사령부는 (아·태)지역 내에서 갈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구로서 어떠한 적대행위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함.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7월 7일 도쿄에서 유엔안보리 결의 84호에 따라 창설되었으며, 1953년 7월27일 한국전쟁 휴전을 위해 조인된 정전협정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유엔사는 일본 정부와 체결한 SOFA(특별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한반도에서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에 있는 7개의 미군기지를 사용하고 있음.



나. 한·중 관계

● 한, 中에 국군포로 문제 협조요청(11/3)

-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3일 중국 측에 국군포로 탈북자 문제 해결에 협조를 요청함. 중국을 방문 중인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베이징의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한나라당-중국 공산당 교류 및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앞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1시간 가량 면담함.
-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장 총장은 중국에 억류돼 있는 국군포로 탈북자 정모씨 문제를 거론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하루 빨리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함. 왕 부장은 장 총장의 발언을 듣고 “관계 당국에 이런 한국 측의 요청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함.
- 그동안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음.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자 문제는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바 있음.
- 장 총장은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국군포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외교 문제를 감안해 우리의 진정성을 나름대로 전달했다”고만 간단히 답변함. 장 총장은 이날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리창춘(李長春) 정치국 상무위원과도 만나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짐.
- 1952년 북한군에 붙잡혔던 국군포로 정모씨는 지난 8월 두만강을 건너 탈북에 성공했으나 중국 공안에 체포돼 현재 중국의 한 병원에서 3개월째 억류돼 있는 것으로 전해짐. 한국 정부는 외교와 정보채널 등을 동원해 국군포로 탈북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다. 미·중 관계

● 오바마 美대통령 15~18일 첫 방중(11/5)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15~18일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5일 공식 발표함. 중국 외교부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초청을 받아 나흘간 일정으로 방중한다고 밝힘.
- 마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후 국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쌍무관계와 국제 및 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함.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방중기간 중국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 등을 시찰할 계획이라고 마 대변인은 덧붙였음. 양국 정상은 이번엔 환율과 기후변화협약, 통상 부문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북한과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임.



● 中 부총리 “中·美 위기극복 공동 노력해야”(11/5)

- 왕치산(王岐山) 중국 부총리는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국과 미국이 협력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함. 관영 영자지 차이 나데일리는 왕 부총리가 4일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방중한 미국 기업인 대표단을 만나 양국간 협력을 강조했다고 5일 보도함.
- 왕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전제하고 “중국과 미국은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국제 금융위기에 공동대응하고 무역과 투자에서의 보호주의를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면서 “21세기를 향한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양국관계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말함.
- 왕 부총리는 이어 “지난주 저장성(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끝난 제20차 미·중 통상무역위원회(JCCT)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함. 방중 기업인 대표단의 단장인 다우 케미컬의 앤드루 리버리스 사장도 “양국 기업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해를 증진하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함.

● 美, 中 자원수출규제 WTO에 제소(11/5)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일 중국이 천연자원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힘. 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EU), 멕시코와 더불어 이 문제를 협의과정을 거쳐 해결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중국에 대한 WTO 제소배경을 설명함.
- USTR는 “미국과 EU는 지난 6월23일 WTO에 중국과의 협의를 공식 요청했고 멕시코도 지난 8월21일 이 같은 요청을 했었다”면서 “이번 WTO에 대한 분쟁조정위 설치 요청에는 EU와 멕시코도 함께 참여했다”고 전함.
- USTR는 또 “우리는 WTO를 통해 미국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제조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미국과 EU, 멕시코 등은 그동안 중국이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보크사이트, 코크스 마그네슘, 아연 등 주요 자원의 해외 수출을 쿼터, 수출관세 규정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통해 제한해 왔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왔음.

● 中, 미국 내 석유개발 지분 확보(11/4)

-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중국 석유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함. 노르웨이의 국영 석유 회사인 스타토일은 지난달 29일 CNOOC 측에 미국 내 석유 개발권 중 일부 지분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CNOOC는 이에 따라 멕시코만 심해의 4개 권역에서 석유 탐사와 개발에 참여



할 것이라고 4일 밝힘.

- 스타토일은 이번 거래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회사의 카이 널슨 대변인은 “매우 작은” 규모라고 전함. 중국은 지난 2005년 캘리포니아 소재 미국 석유회사 유노콜을 185억 달러에 사들이려 시도했으나 미 정계의 강력한 반발로 포기한 바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17일 미국이 금융위기 속 멕시코만 연안 탐사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 이제 중국 석유회사의 진출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함.

라. 미·일 관계

● “日 앞엔 핵폐기, 뒤엔 핵우산 축소 우려”

- 일본의 전 정권인 자민당 정부가 걸으려는 핵 폐기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군축 흐름속에서 미국의 핵우산 축소를 우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함. 아사히신문은 ‘미국 전략태세 의회 자문위원회’ 부의장인 제임스 솔레진저 전 국방장관이 인터뷰에서 일본의 정부 당국자가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핵 군축 과정에서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성이 저하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의회자문위원회에 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함.
- 이는 피폭국으로서 핵 폐기를 국제사회에 호소해온 일본이 뒤로는 핵전력의 유지를 미국에 요구한 꼴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함. ‘미국 전략태세 자문위원회’는 초당파적 기관으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작년 5월 발족했으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핵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출함.
- 솔레진저 전 장관은 “자문위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당국자가 (핵 군축이 진전되면서)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핵우산을 미국이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증언함. 의회 자문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끝부분에 의견을 청취한 일본 정부 당국자로 주미 일본 대사관의 공사 등 4명의 이름을 올림.

● “美·日 정상회담 이달 13일로 확정”(11/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오는 13일로 확정됐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4일 보도함. 오바마 대통령은 하토야마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12일, 13일 이틀간 일본을 공식 방문함. 이번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는 관심의 초점인 오키나와(沖縄)현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의 이전 문제,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임.
- 하토야마 총리는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향후 5년간 아프가니스탄의 반정부 무장세력인 탈레반의 전 병사들에게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총 40억~50억달러의 민생지원 방침을 제시할 계획임.



-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는 기존 미일 합의인 오키나와현내 나고(名護)시로의 이전을 준수해야 한다는 미국과 오키나와현 밖 이전 등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회담 성과가 불투명함.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 이어 14~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5~18일에는 중국, 18~19일엔 한국을 방문할 계획임.

● “美, 日에 수차례 핵 밀약 재확인 요청”(11/2)

-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묵인하는 내용의 미·일 핵 밀약과 관련, 미국측이 밀약의 확인을 재차 요구했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일 전함. 양국 간 핵 밀약은 1960년 양국 안보조약 개정 시 일본 국내로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때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핵무기 탑재 미 함정의 기항과 항공기의 영공 통과 등의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비밀리에 합의했다는 것임.
- 신문에 따르면 이 문제와 관련해 1963년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당시 외상과 에드윈 라이샤워 주일 미 대사가 회담을 갖고 이런 약속을 확인했지만, 미국측은 다음해에 재차 밀약 재확인을 요청함. 이는 오히라 당시 외상이 1964년 2월 국회 답변에서 밀약을 인정하는 듯한 대답을 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짐.
- 그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최근 미국립 공문서관에서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주일 미대사관이 미 국무부에 보낸 1964년 3월 9일자 문서에는 “야당 의원이 오히라 외상에게 ‘미국의 제7함대 함선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을 경우 (일본에 기항하려면)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통해 사실상 인정했지요’라고 확인했다”고 명기돼 있음.
- 이 문서에 따르면 같은 해 3월 5일 라이샤워 대사가 오히라 외상과의 조찬 자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밀약의 재확인을 요청함. 문서는 이어 “현 시점에서는 이 이상 행동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일본측이 밀약을 수용했음을 분명히 밝힘. 교도(共同)통신은 1968년에도 미국이 일본측에 밀약의 재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함.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 이후 일본 정부는 밀약에 대한 재확인을 위한 전문기구를 발족시켰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방침임.

마. 미·러 관계

● 미·러, 핵무기감축 막바지 협상 9일 제네바서(11/2)

-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협정 시한 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와 미국이 오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추가 협상을 벌인다고 이타르 타스 통신이 2일 보도함.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협상 일정을 전하면서 “양국 군축 협상 대표단이 12월 5일 시한 만료 전 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각오 아래 새 협정서 마련을 위해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힘.

- 이후 양국은 이를 토대로 거의 매달 비공개 협상을 진행해 왔고 마감 시한이 임박한 현재 협정서에 들어갈 문구 조정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짐. 이번 협상 결과는 오는 12~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에서 양국 정상에 만났을 때 보고될 예정이며 이때 양국 정상의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바. 기타

● 후진타오 “우주 평화적으로 사용한다”(11/6)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6일 중국의 우주 군비경쟁 동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련, 우주를 계속 평화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함.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후 주석이 중국 공군 창군 60주년을 기념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공군평화발전포럼’에 참석하는 세계 25개국 공군 참모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함.
- 후 주석은 “중국은 방어 위주이며 군사 확장이나 군비경쟁을 절대 추구하지 않고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국방정책을 흔들림 없이 고수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이어 “중국은 평화적인 발전의 길을 계속 걸어 나갈 것이며 평화적인 공존 5대 원칙에 입각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친선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이에 앞서 중국 공군사령관인 쉬치량(許其亮) 상장은 지난 2일 중국 공군은 우주에서의 군비경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우주에 무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함.

● 칠레 대통령 “한·칠레 관계 업그레이드 필요”(11/5)

- 다음 주 한국 방문을 앞둔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이 4일 한국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바첼레트 대통령은 이날 칠레 산티아고의 모네다 대통령궁에서 연합뉴스를 포함한 6개 외국 언론사 특파원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한국과 칠레의 상호 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세미나와 비즈니스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힘.
-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초청으로 오는 10~12일 한국을 방문하는 바첼레트 대통령은 정상회담 외에도 한·중남미 고위급포럼, 경제 4단체 주최 오찬 간담회, 양국 기업인 조찬 간담회, 이화여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등에 각각 참석할 예정임. 바첼레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양국 간 경제 통상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 모색에 초점



이 맞춰질 전망이다.

- 그는 “칠레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양국 간 통상 발전과 투자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칠레는 미국과 시간대가 똑같아 미국 진출 기업의 서비스센터 등을 우리 쪽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칠레는 비즈니스 전진기지로 가치가 높다”고 강조함. 경제 분야 외에 칠레의 이공계 인재들을 한국 대학의 석박사 과정에 유학보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과 방산 협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 에두아르도 프레이·리카르도 라고스 전 대통령에 이어 칠레 정상으로는 세번째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바첼레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의 서두부터 한국과의 협력 문제를 강조한 데 이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긍정적인 효과도 더불어 강조함. 바첼레트 대통령은 “칠레와 한국은 1962년부터 외교관계를 맺은 우방 국가로 발효 5주년을 맞은 한·칠레 FTA 또한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본다”며 FTA 발효 이후 늘어난 양국 교역량과 한국 상품의 칠레 시장 점유율 증가 등의 사례를 직접 언급함.
- 특히 FTA 체결 당시 벌어진 농산물 시장 개방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FTA로 인해 한국 농업이 위협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현재 통계로 볼 때 FTA가 한국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 같지는 않다”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힘. 실제로 칠레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 재개하기로 한 400여개 칠레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협상을 앞당겨 시작하자고 최근 한국 정부에 제의한 바 있음.
- 한국에 이어 중국과 싱가포르를 차례로 방문하는 바첼레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경제위기 재발 방지와 자유무역 증진을 위한 경제 논의 등과 더불어 태국 등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FTA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함. 바첼레트 대통령은 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선진국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제 금융 부문에서도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등의 역할이 보다 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 주한獨대사관 “한국 아프간파병 ‘환영’”(11/4)

- 주한 독일대사관은 4일 “아프가니스탄은 평화와 안정, 장기적 개발이 필요한 상황으로,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및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힘. 대사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아프간의 평화는 아프간 국민에게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며 “독일은 한국과 함께 아프간에서도 평화와 개발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독일은 아프간 동북부의 쿤두즈주(州)와 바다크산주에서 각각 700여명과 460여명 규모의 지방재건팀(PRT)을 운영하고 있으며 1천명이 넘는 군을 파병하고 있음.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130~150명 규모의 PRT를 독자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 병력을 파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프간 재건 지원방안을 발표함.

● 하토야마 “집단적 자위권 행사금지 계승”(11/3)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현지 언론이 3일 전함. 신문에 따르면 그는 2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일문일답에서 “신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만큼 (일본 헌법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한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다”며 “이것은 하토야마 내각의 통일된 생각”이라고 말함.
-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권리임. 유엔헌장 51조에는 자국에의 침해를 배제하는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이를 주권국의 ‘고유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일본은 개별적인 자위권 행사는 인정하고 있지만, 자국 헌법 9조가 ‘전쟁 포기, 전력비보유’를 명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민주당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간사장은 유엔결의에 근거할 경우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도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하토야마 총리는 당정간 입장차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에 의한 헌법 해석은 내각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해석이 우선임을 분명히 함.

● 日, 아프간에 5년간 6조5천억원 지원(11/3)

- 일본 정부가 2010년도부터 5년간 아프가니스탄에 총 4천억~5천억 엔(약 5조2천억~6조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전함. 하토야마 총리는 오는 12일 방일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할 방침임.
-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해상자위대에 의한 인도양에서의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지원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에 아프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의 양해를 구한다는 방침임. 지원 방안은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 등 관계 각료들이 5일 회동해 최종 결정할 계획임.
- 일본 정부는 이들 자금을 아프간 수도 카불 주변의 수도권 개발, 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관 급여 지원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임. 일본



정부는 올해 들어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해 아프간의 경찰관 8만명의 6개월치 급여를 지원했지만, 치안 악화로 경찰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연장하기로 것으로 알려졌다.

- 또 빈곤 때문에 탈레반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병사들에 대해서도 토목공사 등의 직업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함. 일본 정부는 직업 훈련 기간에는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中 서방제재 속 미얀마 영향력 확대>(11/3)

- 서방이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틈을 타 중국이 미얀마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석유 천연가스유한공사(CNPC)는 중국과 미얀마를 잇는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얀마에서 항구 건설 공사에 착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 보도함.
- 통신은 중국 현지 신문인 중국석유보(中國石油報)를 인용, CNPC가 지난 31일 미얀마 벙골만 차욱피우 지구의 마다이(Maday) 섬에서 항구 건설을 시작했다고 전함. 이번에 건설되는 항구는 미얀마와 중국을 잇는 송유관의 출발점으로, 771km에 달하는 송유관이 완성되면 초기에만 연간 1천200만t의 석유를 중국으로 실어나를 수 있음. CNPC는 또 미얀마에서 연간 120억m³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가스관도 건설할 계획임.
- 미얀마 군사정부도 이번 프로젝트로 향후 30년간 10억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챙기는 것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내다봄. 미국 등 서방은 아웅산 수치 여사 등 민주 인사들을 탄압한 미얀마 군사정부를 경제제재 등으로 압박해 왔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함. 중국-미얀마 석유·가스 수송관 건설로 미얀마 군사정권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목표가 달성하기 더 힘들어질 전망이라고 WSJ은 분석함.

● 러시아, 핵안보기금 6년간 6천500만弗 기부(11/3)

- 러시아가 2010년부터 6년 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核) 안보 기금(NSF)에 6천500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라고 3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비탈리 추르킨 대사는 전날 열린 유엔총회의 한 소회의에서 “NSF에 2010년 1천500만 달러, 그리고 2011~2015년에 매년 1천만 달러 등 총 6천5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며 “러시아는 그 돈이 국제 핵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NSF는 IAEA가 핵을 이용한 테러 방지 등 국제 사회 핵 안보 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임. 러시아는 또 IAEA 내 기술협력자금(TCF)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며 EBRD(유럽부흥개발은행)가 운영하는 체르노빌 석관기금(CSF)에 올해 1천만 달러에 이어 내년



에는 700만 달러를 기부할 것으로 알려짐.

- EBRD는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체르노빌 원전 시설 보강과 석관 안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난에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런 핵 관련 기금에 지속적인 참여를 하는 것은 이란 핵 프로그램 등 국제 사회의 주요 핵 이슈에서 자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음.

● 아시아에서 역효과 내는 오바마 인권정책<WSJ>(11/3)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의 개입정책은 오히려 아시아 독재자들에게 국내 탄압을 강화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은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시아의 반체제 인사와 양심수에 대한 지지를 공개 표명할 것을 주문함.
-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7월 미-중 전략경제대화 중국 대표단 면담과 유엔총회 연설 등에서 인권·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를 밝혔으나 그의 순방을 앞둔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함. 그는 이런 의구심의 배경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와 티베트 문제에 대해 취해온 일련의 조치들을 꼽았음.
- 티베트 문제의 경우 1991년 이후 미국 대통령들은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에서 만나는 것이 관례화돼 있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중국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지적임. 백악관은 티베트 문제에 대한 더 정교한 접근이 중국 방문 성공과 티베트에 대한 성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반대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임.
-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와의 면담 계획을 취소한 후 인도 등 다른 나라에 미국의 예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달라이 라마에게도 해외여행과 국제 지도자들과의 면담 중단을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음. 미얀마의 경우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는 제재 일변도에서 제재와 개입을 병행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고 미얀마 군사정권과 대화에 나섰으나 미얀마 군사정권은 오히려 아웅산 수치 여사 등 민주화 운동가들과 국내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임. 그린 고문은 티베트와 미얀마의 예는 '개입정책이 미국의 우선순위 변화와 탄압에 대한 용인으로 인식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심각한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말함.



● “APEC, G20 이어 경기부양책 지속 재차 다짐”(11/2)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이달 중순 싱가포르에서 열릴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인 경기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경기부양을 계속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 협상진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21개국 APEC 정상들은 “경제회복이 아직 굳건한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확인할 때까지 경기부양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의 성명 채택은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임.
- 이는 현재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기부양책과 초저금리정책 철회 등의 출구전략 추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APEC 재무장관들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신용시장이 아직 회복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정긴축을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 재무장관들은 “더블딥(이중침체)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특단의 경기부양책을 철회하는 데 있어 신중한 계획과 시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로이터 통신은 2일 APEC 정상과 재무장관 회의를 위해 마련 중인 성명서 초안들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함.
- 이와 함께 APEC 정상들은 WTO 도하라운드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가능한 한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의사도 서로 확인할 예정이다. 오는 12~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대만, 페루, 러시아, 미국, 베트남 등 21개국이 참석함.

● “아프간 한국PRT, 민·군·경 공조 중요”(11/2)

-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일 “아프가니스탄에 설치될 한국의 PRT(지방재건팀)는 민·군·경 3자간 유기적 협조하에 운용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 및 3자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이 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아프간 PRT 설치 및 파병과 관련한 첫 관계부처 합동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아프간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 독립적인 한국 PRT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이는 우리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프간 재원에 기여 정도가 적은 점을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글로벌 코리아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정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함.

- 회의에서는 아프간 PRT 설치를 위한 정부합동실사단의 구성 및 임무, 향후 합동회의의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와 함께 파견 시기 등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짐. 실사단은 아프간 현지에서 현지 중앙정부와 주 정부, 나토 관계자 등과 협의해 PRT 설치·운용 지역과 부지상황 점검, 파병수요 확인, 위험 정도 파악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됨.
- 외교부 당국자는 “실사단의 구체적 임무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구체적인 구성 및 파견 시기는 앞으로 수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더 거쳐 확정될 전망”이라고 말함. 정부는 이달 중 실사단을 파견할 방침이며 실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PRT를 설치·운용할 지역을 선택하고 민간요원과 보호병력의 형태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

● <中, 阿 자원획득 이면의 정치경제학>(11/2)

- 한 달이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중국과 아프리카 각국간의 자원개발 협약 소식이 예사롭지 않음. 서방국가들은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원을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나,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이해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범주를 넘어섬.
-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적 유대관계를 보다 넓혀나가는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경제 성장과 성공을 인정하거나, 적어도 견제하지 않을 친구국가들을 늘려가길 원하고 있음.
- 공산주의 국가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간의 유대는 이미 건국 이후인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감. 1971년 중국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비동맹활동을 통해 유대를 쌓아온 아프리카 각국의 지원이 큰 힘이 됐음. 아프리카 전공인 크리스 엘든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현재의 경제적 이해관계 확대에 주목하고 있으나 실상 중국은 아프리카 각국과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치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왔다”고 말함.
- 이렇듯 정치적 협력관계에 머물러오던 이들의 관계는 고도 경제성장기를 맞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이 증대하면서 점차 실제 경제 협력 면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06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첫 정상회의를 통해 대아프리카 투자 및 무역원조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 11월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아프리카 각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함.
- 오는 8~9일 이집트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중국-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50억달러 규모의 대아프리카 차관 및 신용 제공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조4천억달러 규모로, 아프리카 전체 국가를 합친



- 1조2천억달러의 네 배 수준임.
- 그리고 중국은 자신의 경제 성장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왔음.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은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30%가량 증가했으며, 중국산 의복과 자동차, 원격통신수단, 기타 상품들이 붓물터지듯 아프리카로 유입됐음.
 - 자연자원 확보나 단순한 교역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님.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ICBC)은 남아프리카 스탠더드 बैं크의 20% 지분을 사들이며 직접 투자에 나섰다. 선전에 기반을 둔 중국 최대 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로지도 북아프리카에서 사업 교두보를 확보한 뒤 사업 영역을 남부로 확대하고 있음. 중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아프리카 시장은 서방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피할 수 있는 대안시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임.
 - 하지만 중국의 자원획득 외교에 대해 국제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임.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지난해 63억달러 규모의 원유를 수단에서 수입하면서 무역금지 조치를 무산시키는 바람에 다르푸르 분쟁의 비극이 심화됐다고 비난함. 이에 대해 중국의 외교당국은 중국이 자원 획득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음.

〈표〉 중국-아프리카 관계 개황

경제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전체 교역규모 1천68억달러(전년 대비 45.1%↑, 중국측 수입 560억달러, 중국측 수출 508억달러). • 中수입은 주로 원유로, 앙골라, 수단, 나이지리아,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등이 주요 수입원임.
정치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1950~1960년대 신생 아프리카 독립국들에 경제지원 통한 유대 강화. • 아프리카 국가들,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 및 대만 회원자격 박탈에 기여. • 2006년 중-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외교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대만 배제하고 아프리카 각국과 단독 수교 추구. • 부르키나파소, 감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등 4개국은 현재 중국·대만과 동시 수교국임. • 말라위, 2007년 12월 대만과 외교관계 단절 후 관계 강화.

● 한·폴, 수교20주년 축하메시지 교환(11/2)

- 한국과 폴란드는 1일 양국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장관 명의의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일 밝힘. 한국은 이를 통해 수교 후 20년의 짧은 기간에 양국 관계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실질협력과 국제무대 협력의 확대와 문화·인적교류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 외교부 관계자는 “폴란드는 유럽 국가 중 한국 최대의 무역흑자국이
자 5대 투자대상국으로 연간 5만여명의 양국 국민이 상호 방문하고
있다”며 “양국은 합동연주회와 영화제 등 다양한 수교 2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